

“박 대통령, 사임할 기회도 놓쳤다”

김승환 교육감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받은 9일 오후 7시3분 이후 권한·권리 행사 정지… 사직원 못 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스스로 사임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전에 사임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늦었다는 것.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이 사직권을 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은 2016년 12월9일 오후 7시3분 이후로 사직권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정말 단 하루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직권을 내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국회법 제134조 2항은 ‘소추의 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권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직권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문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는 안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재도의 취지다.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했고 아울러 법률질서도 어지럽혔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돼있다. 이를 국회법 제134조 2항과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9일 이후로는 사직권을 낼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탄핵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순수한 의미의 사법기관이나 정치기관이 아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은 주권자인 국민이 예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감사원의 고발과 관련해 “명색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교육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면서 “감사 때는 ‘별거 아니다, 표적감사 아니다’라던 감사원이 결과적으로 표적감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만약 내가 인사비리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기관장 중에 인사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이번 표적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 “국정교과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교육부에서는 원래 추진 원칙을 유지하며 12월 말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1년 유예, 국·감정 혼용 등을 검토하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교육부에서 단정적으로 확정된 방안, 교육부에서 검토한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됐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여론조사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다”며 “이념과 상관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과 통합 보수 연합 출범식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 보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유철(왼쪽부터) 의원, 서정원 의원, 김관용(공동대표) 경성북도지사, 이인제(공동대표) 전 의원, 정우택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무성 “신보수와 중도가 손잡고 국가 재건해야”

“전두환 정권 때 ‘재벌 등쳐서’ 형성한 당 재산… 국고에 헌납해야” … “친박은 박 대통령 노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박계 모임 비상국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동지들과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신중하게 상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법적 절차를 지키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게 보수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봉건시대 수준에 대한 충성과 신의 문제로 접근하는 가짜 보수에 보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친박계를 직격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지금 절실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는 보수, 잘 못할 때 책임지고 주기적으로 스스로 개혁하는 진짜 보수정치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박이 잠악하고 있는 현 새누리당으로는 좌파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 어떤 변신을 해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지 않을 때”라며 “이제 가짜 보수를 거둬내고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아야 한다. 좌파 집권을 막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기문·손학규 진영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동료들과 최종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할 것이다”면서도 “다만 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신당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고, 우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재산에 대해서는 “당을 해체하면 그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며 “새누리당 재산 또한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재벌들을 등쳐서 형성한 재산이다. 이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친박 지도부를 “박 대통령

의 노예”라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저와 유승민 의원 등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보수들에게 배신자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고,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들(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에서 너무나 듣기 민망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저질 막말이 쏟아져나왔다”며 “이 발언은 왜 범죄자인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황변인데 대통령 위에 헌법과 국민이 있다는 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무엇보다 이 엄청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없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점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박 대통령을 직격했다.

/뉴스스

여야정협의체 난항… 3야 제각각 판소리

민주당 “친박계와는 못해” 국민연당 “민주당 입장 부적절” 정의당 “시작부터 파탄”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정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구성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야당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잡음이 일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이 바로 서야 여야정협의체가 정상화될 수 있고 민생문제도 챙길 수 있다”며 “이렇게 흔들려서야

나라가 제대로 온전히 가겠느냐”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친박계 배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실제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돼도 구성원도, 대화의 상대도 정해지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협의체를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새누리당 대표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면 말로만 제안한 것이 사실적으로는 구성이 되지 않겠고, 또는 구성이 되더라도 회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배제된 정의당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에 합의된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시작부터 파탄으로 흐르고 있다”며 “친박 지도부가 강경하게 버티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역시 친박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합의의 한 주체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한 것이다. 가뜰이나 불안한 합의가 그 시작부터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여야정 협의체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뉴스스

이용호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겸 2016 CREATIVE KOREA 대상’을 수상했다.



이용호 의원

2016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시상식은 2016년 한 해 동안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온 선도적인 인물을 선정·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대한뉴스신문과 2016 CREATIVE KOREA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뉴스, 코리아뉴스, 연합매일신문, 다이나미코리아, 시사매거진 2580 등이 주관했다.

주최 측은 이용호 의원의 시상 이유에 대해 “올바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과 휴머니즘 고취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려는 체질로 받아들이고, 향후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이상의 의미와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제1회 국민안전대상’,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봉상’,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관영, 공정거래 심사 강화 ‘원샷법’ 개정안 발의

원샷법 1호기업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임이 밝혀진 가운데, 원샷법의 사업재편 과정에 공정거래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재편 과정이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던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 혹은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지난 첫 번째 원샷법 심사과정에서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끝났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사업재편 1)경영권 승계, 2)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3)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심사 과정에 대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재편을 허가할 것을 법률에 정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원샷법이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나, 핵심적 규제마저도 완화해 해서는 안된다”며 “현행법 시행령상 경영권 승계,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김광수 ‘4대보험 연체이자율 감면’ 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은 13일, 서민들의 4대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4대보험 연체이자율 감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월 1.5%의 연체가산율이 적용되고,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월 3%대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연체하는 사람은 주로 생계형 서민”이라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4대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즉시 합리적으로 재조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4대보험료 연체 이자율 조정을 시작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계속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재홍 기자

민주당 “사드 강행 안돼… 차기 정부로 공 넘겨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시국에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 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뉴스스